56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민주주의 플랫폼’으로서 민주인권기념관 – ‘기념관’을 넘어 ‘플랫폼’으로

이 영 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부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민주주의 플랫폼’으로서 민주인권기념관 – ‘기념관’을 넘어 ‘플랫폼’으로

이 영 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부소장

01 남영동 대공분실 기념시설화의 의미: 독재정권 상징의 시민 공간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민주항쟁 31주년 기념사에서 남영동 대공분실에 민주인권기념관을 건립하는 기념시설화 의미를 "민주주의의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되살리는 일"로 표현했다. 민주주의는 조금만 소홀하면 금세 시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잘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되살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2001년 여야 합의에 의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하고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1]을 추진해온 것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주인권기념관에서 민주주의 역사적 공간과 시간을 되살리는 일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동시에 민주주의를 열어가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독재정권의 야만적인 폭력과 억압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이 공동체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시민의 역사이다. 민주주의 공간은 시민이 자기 역사로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의 민주주의를 성찰하며 미래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독립기념관이 일제 강점에 맞서 독립운동을 통해 조국의 광복을 쟁취하는 민족의 아픔과 실천, 해방을 상징하는'민족의 공간'이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근대 국민국가 수립(state building)과 국가의 발전을 상징하는 '국민의 공간'이라면 민주인권기념관은 독재정권의 폭압적 통치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성취,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시민의 실천과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상징하는 '시민의 공간'이다.

'독재정권 상징의 민주주의 공간화' 과정은 현재의 민주주의와 분리될 수 없으며, 민주 공동체의 권력의 담지자로서 시민의 자기 실천을 매개한다. 따라서 '시민의 공간'으로서 민주인권기념관이 과거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기념관(memorial)의 역할을 넘어 시민들이 자기 역사에 대한 경험과 기억 속에서 현재의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성찰하며, 참여와 실천을 통해 미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1)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명시된 사업으로, 민주화운동기념관은 추진과정에서 이미 '한국 민주주의 전당'으로 방향이 구체화 되었다. 기념관의 방향을 제시하는 대부분의 논의가 민주화운동의 역사만이 빠곡하게 기록되는 공간으로 오해하는 것은 법적 명칭을 기념관의 명칭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인류 공통의 재앙에 맞서 한편으로는 폐쇄적 민족주의와 권위주의의 확산, 차별과 편견의 확대 속에서 민주주의의 심화·확대, 세계 시민으로서의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의 단절과 소외, 정보의 왜곡, 질병으로부터의 위험을 '디지털 혁신(전환) 가속화'와 초연결을 통해 극복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확대'와 '디지털 혁신'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는 바로 오늘날 시민뿐만 아니라 민주인권기념관이 맞닥뜨린 또 하나의 과제인 셈이다.

이 글은 우선 기념관으로서 민주인권기념관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구적인 시각에서의 국가폭력과 인권 담론은 폭력이 일상화된 통치로서 독재체제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특정한 장소성을 갖는 과거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연결된 자기 역사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민주인권기념관이 '전통적' 기념관을 넘어 민주주의 실천 주체로서 시민의 의미를 확인하는 적극적인 공간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역사를 마주하는 낮은 시선'이라는 개념의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설계 공모 당선작에서와같이 민주인권기념관의 시선은 남영동 대공분실 내부를 향하는 경향이 강하다. 남영동 대공분실이 과거의 국가폭력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와 세상과 소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인권기념관의 시선은 동시에 외부를 향해야 한다. 신축건물에서 남영동 대공분실 본관을 조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남영동 대공분실 본관의 꼭대기에서 세계를 조망하고, 신축건물에서 고층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예정된 적막한 캠프킴을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 이는 남영동 밖의 세계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를 직시하고 소통·연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2)]

2) 캠프킴 등 주변 부지를 활용한 민주인권기념관 조감도를 제작함으로써 향후 용산 미군기지의 일부인 캠프킴 개발 시 현재 '용산갤러리'와 같은 공간이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공공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02 기념관으로서 남영동 대공분실의 과제: 현재의 민주주의와 소통하는 기념관

한국에서 민주주의 이행을 가져온 1987년 6월 항쟁을 촉발한 요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다. 5·18 민중항쟁에 대한 유혈진압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은 호헌을 통해 정권을 연장하려 했고, 시민들은 직선제 개헌을 통해 정권교체 및 민주화를 이루려고 하였다. 1985년 직선제 개헌을 전면에 내세운'신민당 돌풍' 이후 전두환 정권과 민주화 세력의 개헌을 둘러싼 쟁투는 지속되었다. 대통령 선거의 해인 1987년, 독재와 민주의 피할 수 없는 승부가 예고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했다.

남영동에서의 국가폭력은 민주화운동과 분리되어 설명될 수 없다. 5·18민중항쟁에서부터 시작해서 6월 민주항쟁으로 마무리되는 남영동 박종철 기념 전시관의 서사가 보여주듯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의 국가폭력은 독재에 대한 목숨을 건 저항에 대한 억압 즉,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다.[3] 국가폭력은 명확하게 독재정권을 위해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기 '남산' 중앙정보부와 서빙고 보안사, 그리고 남영동을 비롯한 대공분실은 "언론과 사법부를 불법 사찰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민주 인사들, 간첩 조작의 희생자들, 심지어 여야 정치인들까지 고문하고 수사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법치를 무력화시켰다."[4] 이들 기관에서는 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조작'간첩사건을 빼 들었다.[5]

유신체제[6]와 같은 독재체제에서 국가폭력은 남영동과 같은 은폐된 공간에서 특별한 수행체계에 의해서만 행해진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어디에나 작동하였다. 국가폭력 없는 독재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폭력과 독재정권은 한 덩어리이다. 독재정권의 폭력도구로서 남영동 대공분실의 역사성과 장소성은 '남영동에서의' 국가폭력과 인권, 즉

3) 여기에는 독재정권과 검찰, 경찰, 법원, 노동부와 같은 행정기관, 학교, 언론뿐만 아니라 때로는 미국까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인권기념관이 캠프킴을 바라보아야 하는 다른 이유이다.

4) 김학민. 2017.『만들어진 간첩』서울: 서해문집, 55-56쪽.

5) 위의 책, 19쪽.

6) 유신체제는 국가폭력이 일상적이고 총체적으로 사용된 강력한 독재체제였나, YH사건에서 초래된 유신의 붕괴는 이를 역설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YH무역의 신민당 농성과 이에 대한 폭력진압은 신민당 김영삼 총재 제명과 부마항쟁으로 이어졌고, 10·26 사건으로 유신체제를 붕괴시켰다.

고문조작의 가해와 피해, 악의 평범성 등의 개념으로만 담기 어렵다. 남영동으로 상징되는 정보·공안기관에서의 국가폭력은 독재체제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진 국가폭력의 극단적인 형태이다. 따라서 남영동에서 기록되고 기억해야 하는 국가폭력은 남산과 서빙고를 포함하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형제복지원사건과 군의문사사건 등이 증명하듯이 군대에서, 집단수용시설에서, 학교에서, 공장에서, 시위현장에서, 병원에서, 경찰서에서, 길거리에서 노동자에게, 장애인에게, 농부에게, 학생에게, 교사에게, 어린이에게, 여성에서, 청년에게 행해진 남영동 밖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총체적이고 일상적인 국가폭력은 때로는 남영동에서의 고문 이상으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이었다.[7)]

남영동에서의 국가폭력은 국가형성기와 한국전쟁에서의 민간인 학살, 또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제노사이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억압하기 위해 시민의 삶에 구석구석 파고든 폭력적 통제와 억압, 그리고 그 극단적 형태로서 고문 · 간첩 조작이다. 이 점에서 민주인권기념관 전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반복되는 폭력적 억압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공동체를 실현·발전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실천이라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적 궤적과 역동성을 드러내고 현재 시민의 삶과 연결시키는 데 실패하고 있다.[8)]

그 이유는 우선 고문폭력 공간으로 특화된 남영동의 '아우라'에 갇혀 독재정권의 총체적·일상적 폭력을 보지 못한 채 특정한 국가폭력의 미시적 체계와 행위에 대해 매몰되기 때문이다. 국가폭력의 총체로서 독재정권이 아니라 국가폭력 수행자의 가해행위와 피해에 집중할 경우 국가폭력의 장소로서 남영동 대공분실의 아우라는 더욱 두드러지겠지만 다양한 민주주의 실천과 여타 국가폭력과 분리됨으로써 역사적·장소적으로 고립된다.

다음으로 민주인권기념관의 '민주'를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을 특정 세력의 역사로 규정하고 이를 우회하여 '인권'에 강조점을 두려는 경향에 기인한다. 민주인권기념관에서 기념하고자 하는'민주'는 '민주화운동(사)'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실천과 집합적 성취의 기록으로서 '민주주의' 역사이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의 국가폭력을 포함한 독재정권에서의 국가폭력은 민주화 운동가 또는 '운동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가해진 폭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주체인 시민들에게 가해진 반 인권적인 폭력이다.

독재의 폭압을 상징하는 장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기념하는 것은 위정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의 권위주의적 통치도 결국 시민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명백히 보여주기 위함이다. 시민들에게는 남영동에서의 아픈 역사가 과거·특정 장소에서 행해진 역사가 아니라 언제든지 일상에서 재현될 수 있는 현재의 민주주의의 문제로 성찰하고

---

7) 소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무고한 시민들이 경찰의 고문·폭력과 검찰과 법원의 방조 속에서 살인죄로 처벌을 받았고, 민주화 이후에도 약촌오거리 사건 등 무고한 시민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보는 일은 지속되고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의 장발 단속, 미니스커트 단속, 대중가요 통제 등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바로 연결되어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8) 과거사위원회에서 설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거사 연구재단의 사료관이 국가폭력 관련 역사를 주되게 다룰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실천하게 하기 위함이다.[9] 한국 민주주의가 세계의 민주주의 현장과 만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지점이다. 홍콩을 비롯한 전 세계의 민주화 현장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떠올리는 것은 한국이 소위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선진국이어서가 아니라, 5·18에서의 학살, 정보·공안기관에 의한 고문폭력과 간첩조작사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대한 살인폭력 진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발전시킨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시민들의 의지와 실천이 바로 자신들의 역사일 것이라는 점에서 희망과 용기, 영감을 받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가 독재정권의 국가폭력으로부터 억압받는 세계 시민들에게 미래의 자기 역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인권기념관은 세계 민주주의 현장, 그곳의 투쟁하는 시민들과 연결되어 있다.

끝으로 민주인권기념관은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에 관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 해법을 찾는 공간이어야 한다. 불과 몇 년 전에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합작품이었다. 촛불시위 과정에서 군부에 의한 쿠데타 계획이 입안되었다는 폭로가 지속되었다. 자기권력화 한 검찰은 여전히 민주적 통제를 거부한 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에 따라 반사이익을 얻은 경찰은 민주적 통제 수단의 미비 속에서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다. 권위주의적 통치와 국가폭력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역사이며 여전히 민주주의의 중요한 문제이다.[10]

9) 국가폭력의 가해자·체계에 대한 기록과 피해자에 대한 치유는 민주인권기념관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이다.

10) 남영동 대공분실이 소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장면은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인권을 강조한 '경찰의 양해'였다. 다른 대공분실이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03 역사기반 민주주의 플랫폼으로서 민주인권기념관

한국 사회는 절차적·형식적 수준의 민주주의는 유지되지만,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에 진입한 지 오래다. 1990년대 후반 IMF 사태를 전후해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민들의 요구보다는 자본이나 특수한 권력·이해집단의 요구가 관철되기 시작했다. 불과 4년 만에 아무도 기념하지 않는 촛불집회는 이러한 포스트 민주주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민주화 이후 국가에 의한 노골적인 폭력의 행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시민들은 독재정권에서의 국가폭력을 능가하는 폭력을 일상적으로 마주한다. 한국에서 자살자 수는 하루 평균 38명, OECD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은 OECD 국가들의 평균 2배에 해당하는 24.6명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2019년 기준). 이에 더해 하루 4명, 연간 2천 명에 가까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폭력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11] 특히 무한경쟁체제에서 자신의 안전과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넣는 소위 '위험의 외주화'의 폭력성과 반인권성은 독재정권에서의 폭력과 다르지 않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대한 방치와 방관이라는 집단적 폭력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독재정권에서와는 달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책임의 당사자는'시민'이다. 민주인권기념관이 현재의 민주주의와 시민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민주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시민의 책임이다. 포스트 민주주의의 시대, 시민의 실천은 저항으로서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에 대한 지지와 참여로서의 전통적 시민·사회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민주인권기념관의 역할은 이와 같은 고민에서 시작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재현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과 영감을 주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민주인권기념관의 주된 역할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가속화에 따라 일상화된 온·오프라인 믹스[12]는 민주인권기념관이 현재까지의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과거에서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시민

11)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따르면 사고 사망자수는 855명, 질병 사망자수는 1, 165명으로 총 2,020명에 달했다.

민주주의 플랫폼으로서의 발전을 가능하게 해준다.

우선 민주인권기념관의 전시기획과 공간구성은 이와 같은 현재의 변화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전망해야 한다. 기존의 전시기획이 오프라인에서의 전시를 온라인에서 볼 수 있게 하거나 사료와 사진 등 세부 정보를 디지털화된 방식을 보여주는 오프라인 기반 온라인 전시였다면, 향후 기념관은 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전시로 확장될 수 있다.

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전시의 장점은 첫째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민주인권기념관의 가장 큰 과제는 전시·시민참여 공간의 제약성이다. 민주인권기념관은 한국에서 최초의 그리고 상당 기간 유일한 민주주의 기념관일 가능성이 크다.[13] 온라인 기반의 전시는 별도의 공간과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전시를 가능하게 해준다. 여기서 온라인 전시는 오프라인 전시를 보조하거나 별개로 특화된 전시로 기획될 수도 있지만,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형태로 기획될 수도 있다.

둘째, 전시의 주체가 전문가 등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시민 참여형 전시가 가능하다. 시민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아카이빙 자료에 자신이 소장한 자료를 추가하여 온라인 전시관을 구성할 수 있으며, 민주인권기념관의 시민참여 공간이나 디지털화된 전시공간을 활용하여 자신의 전시를 오프라인에서 실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되며, 그것은 서로 연결되어 민주화운동의 대 서사를 구성함은 물론 공통의 경험이나 유사한 문제의식의 전시기획, 거주지 등에 따라 세대와 공간을 넘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특히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들은 그 특성상 감추어졌거나, 출처와 주체, 참여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시민 참여형 전시는 이러한 사료의 확보나 분석에 있어 집단지성의 힘을 기대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소장된 사료는 민주화운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90년대 활성화된 시민·사회운동 관련 자료, 2016~2017년 촛불시위 자료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초등학생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자기 역사에 대한 기록과 공유를 통한 연대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시민들은 지속해서 자신의 활동으로 아카이브를 채워가면서 미래의 아카이브에 무엇을 채울지 구상할 수 있다.

민주인권기념관에서의 교육은 전통적인 기념시설에서의 교육이나 제도화된 민주시민교육과

12) 온·오프라인 믹스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은 교육 현장이다. 특히 학교경험이 없는 올해 입학한 초등학생들에게 학교는 온라인(EBS)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학습 방법이다. 방과 후 교실의 경우도 전통적 오프라인 방식에서 벗어나 재료 등을 집으로 배송해주고 줌을 통해 교육을 진행한다. 이 경우 학교 등에서는 공간의 제약 등으로 진행하기 어렵던 움막 만들기를 각자 집에서 진행할 수 있다. 4~5명의 그룹을 만들어 신청하면 앞치마 등을 포함한 모든 김장 물품을 배송해주고 온라인을 통해 김장 교육을 진행한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교육 신청이라는 의지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비용부담 없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13) 일반적으로 기념사업이나 기념관들은 특정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같이 민주화운동 전체를 다루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장기간에 걸친 민주화과정을 기념하는 것 역시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에 해당한다.

달라야 한다. 코로나라는 위험과 디지털 가속화에 따라 기본적인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강의 공간에서는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플립러닝이 활성화되고 있다. 시민들은 기념관에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 기념관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 역사와 독재정권의 국가폭력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민주인권기념관에서는 남영동 대공분실이 갖는 현장성과 중요한 사건과 현장을 담는 '원본' 사료에서 나오는 역사적 무게와 영감을 얻게 된다. 마치 교과서에서 보던 유명 화가의 그림을 미술관에서 보듯이 그러한 역사의 현장과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사를 만나면서 시민으로서의 책무와 미래에 대한 영감을 얻는 것이다.

단순한 지식이나 역사적 사실의 전달은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교육의 몫이 아니다. 민주인권기념관에서의 교육은 스스로 교육 방법과 목표를 설정하는 시민의 자기주도 학습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토론·심화 학습이 주를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같은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을 뜻하는 크루(crew) 문화이다. 물론 정규 해설·교육 프로그램이 필수적이겠지만 관심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크루를 통해 실천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정해진 동선과 교육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사전에 전시 동선과 질문사항, 듣고 싶은 경험담 등으로 관람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계획 중 크루가 형성되면 그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육의 공간은 민주인권기념관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적극적으로 전국의 역사박물관 내지 기념시설, NGO단체들, 민주주의 현장에 대한 방문을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다.

04 맺음말: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상상력

민주인권기념관이 개관하기까지 2년여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2년이라는 시간은 제대로 된 건축과 전시를 준비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시간이다. 촉박함은 상상력을 제약하기 마련이다. 전통적 기념관으로서 민주인권기념관의 공간적 제약은 명확하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시민적 상상력이다. 한정된 공간에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 하기보다는 시민들이 공간을 직접 채울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남영동 대공분실 본관에서 새로 건축될 신관으로 이어지는 과거에서 현재로의 전시의 동선에서 현재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을 현재 시민사회의 다양한 아젠다를 담는 기획전시를 위해 남겨둘 수도 있다. 지난 기간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을 임시로 운영하면서 진행된 시민사회단체들의 '실천이 병행된' 전시는 민주주의 플랫폼으로서의 민주인권기념관의 상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다양한 시민사회의 주체들이 기념관 전시에 참여함으로써 기념관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민주인권기념관의 '민주화운동' 관련 전시는 지역 곳곳에 건립되는 민주화운동기념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기념관과 민주인권기념관이 연결되면 전국에서 진행된 다양한 민주화운동들을 종합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지역에서는 부족한 전시콘텐츠를 보완함으로써 지역의 주된 관심사인 운동의 전국화와 자기 역사 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그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순회 전시를 진행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을 기념·계승하는 대표적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광화문 광장이 조선왕조를 상징하는 공간에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을 의미하는 공간이자 촛불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이 된 것처럼 남영동 대공분실이 현재까지 규정된 공간적 특성에 머무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지난해 진행한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이 세계 민주주의 공론장을 꿈꾸며 진행했듯이 다양한 상상력과 실천을 통해 새로운 장소성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가속화는 민주인권기념관의 한계를 극복할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역사기반 민주주의 플랫폼으로서 민주인권기념관은 한국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민주주의의 실험이 될 수 있다.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과정에서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상상력이다.

‘민주주의 플랫폼’으로서 민주인권기념관 – ‘기념관’을 넘어 ‘플랫폼’으로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20년 12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12
9 772508 324001
ISSN 2508-3244